

고원식 횡단보도로 사고 예방·보행 편의 ↑

전주시, 도로 관련 사업 설계 시 고원식 횡단보도 의무 설치하도록 내부지침 개정 계획

전주시가 과속방지턱과 같은 높이의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를 의무화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불편도 해소하기로 했다.

시는 무단차·무장애 보도를 조성해 보행약자의 보행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도로 관련 사업 설계 시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내부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전주시가 과속방지턱과 같은 높이의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를 의무화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불편도 해소하기로 했다.

보행로보다 턱을 낮은 기존 횡단보도와는 달리 고원식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자체가 과속방지턱 역할을 해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와 보행로간 단차가 없어 보행약자의 이동편의를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시는 그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통해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를 권장해왔으나 실제 설치된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차량 속도가 30km/h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에 대해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무원과 설계사, 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도 진행하기로 했다.

시는 올 연말까지 종합경기장 인근과 시청 인근 등 3곳에 고원식 횡단보도를 시범 설치하기로 했다. 이어 오는 2023년까지 관련 예산을 확보해 어린이보호구역과 교통섬 접속횡단보도,

이면도로와 주간선도로 접속부 순으로 점차 바뀌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영봉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횡단보도가 연석과 비슷한 높이로 설치돼 보행자가 별도의 수직이동 없이 횡

단할 수 있어 보행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발굴·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취약계층 복지문제 해결 최선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복지공동체 공모사업 배분 전달식 개최... 14개소에 1억5900만원 복지사업비 지원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은 1일 전주중부비전센터에서 '2021년 복지공동체 공모사업 배분 전달식'을 열고, 동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와 복지기관 등 14개소에 총 1억5900만 원의 복지사업비를 지원했다.

시민의 성금과 대방건설의 지정기탁금을 통해 마련돼 이날 각 기관·단체에 배분된 복지사업비는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복지문제 해결에 사용된다.

특히 복지사업비를 지원받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5개소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스스로 복지자원을 연계하는 마을복지사업 실행 모델을 구축해 지역사회의 건강한 변화를 이끌어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18년 12월 출범

한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은 전주 시민의 행복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 수행을 위해 10년간 1004만 원을 기부하는 '희망1004기부 릴레이'와 매월 1만1004원을 기부하는 '삼삼한 챌린지'를 추진해 민간 재원 마련에 힘쓰고 있다. 또 ▲전주형 SOS 긴급지원사업 ▲전주사람은행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운영 등 전주형 긴급지원체계를 구축해 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유창희 이사장은 "복지공동체 지원을 통해 나눔과 공생의 문화를 실천하는 또 하나의 장이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복지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이해하고 폭넓게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도토리골 새뜰마을 사업 순항

전주시, 주거환경 개선 위해 2019년~내년까지 4년간 추진

전주시는 지난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전북도 도토리골 새뜰마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새뜰마을 사업은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지붕개량, 집수리, 빈집 철거, 가로등·방범용 CCTV 설치, 헛터 조성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해 생활여건을 좋게 만드는 사업으로, 도토리골 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내년까지 4년 동안 추진된다.

시는 가로등과 방범용 CCTV 설치, 집수리 사업 등을 완료한 상황으로, 현재 재해예방 및 빈집철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올 연말까지 헛터를 리모델링하고 주차장 2개소와 헛터 1개소를 조성하는 등 주민공동이용 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다.

시는 또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 연계 및 돌봄 프로그램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골 돌이를 초복에는 전주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을 받아 삼계탕과 과일, 떡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이후 국제와이즈맨, 풍남로

타리클럽, 전주연탄은행, 새마을부녀회 등 14개 기관에서 3000만 원 상당의 식품기프트(쌀, 라면, 미역), 김장김치, 전기장판, 이불, 선풍기 등이 지원됐다.

이와 함께 시는 민관협력형 노후주택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한국해비타트와의 협업과 KCC, 코멕스 등의 현물 후원을 통해 39가구에 집수리 서비스를 제공했다.

시는 도토리골 새뜰마을에서 추진한 주민 돌봄 프로그램과 민관협력형 노후주택개선사업 등이 향후 새뜰마을 사업의 표준모델로 정립될 수 있도록 더욱 내실을 다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015년 팔복동 추천마을(총사업비 72억 원)을 시작으로 2016년 풍남동 습암마을(43억 원), 2019년 전북도 도토리골(43억 원), 2020년 남소송동 마당재(43억 원), 올해 동안산동(42억 원) 등 5개 지역에서 새뜰마을 사업을 전개해왔다. 총사업비 규모는 243억 원(국비 170억 원)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장류 기능성 규명 사업 선정

24억원 사업비 확보... 안전성·기능성 입증 지원에 판로 확대 기대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원장 오병준)은 최근 지역 혁신기관들과 공동으로 추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1

년 장류 기능성 규명(안전성 모니터링) 사업'에 선정돼 총 2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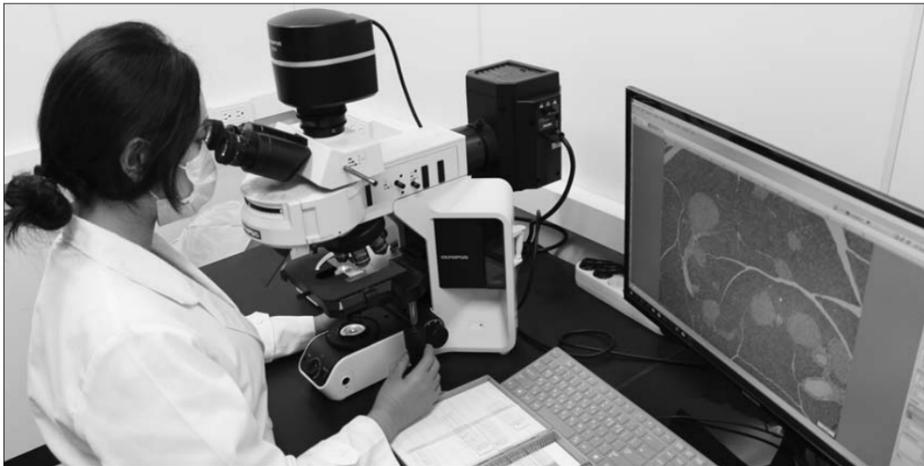
이에 따라 연구원은 전통장류 산업을 안전화하고 글로벌화하기 위해 전통장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식염, 유해 미생물을 비롯한 유해 물질에 대한 안전성 입증에 지원해 소비자의 불안

감을 해소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세포, 동물 및 인체대상 실험 수준에서 전통장류의 건강 기능성을 검증하는 데 집중하고 중소규모 장류업체를 대상으로 소규모 HACCP 매뉴얼 개발 및 요소 관리 교육도 지원하게 된다.

연구원은 전통장류 업체에 대한 안정성 및 기능성 평가 지원을 통해 관련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기술경쟁력을 높여 지역기업들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를 도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시를 포함한 전북 지역의 장류산업은 지난 2017년 기준 사업체 수 77개, 종사자 수 65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장류 제조업체 중 70%가 종업원 5인 미만 업체로 영세한 실정이며 이 같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오병준 연구원장은 "전통장류의 건강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규명함으로써 관련 농가 및 업체의 수익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전주·전북의 농생명 식품산업 및 전통장류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HACCP 수준의 제조시설 구축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은 최근 지역 혁신기관들과 공동으로 추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1년 장류 기능성 규명(안전성 모니터링) 사업'에 선정돼 총 2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maeil.com에서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